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결정요인 : 북한 핵실험과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 비교

한광희
서울대학교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2년 5월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EAI는 정책 이슈에 관하여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EAI는 등록된 고유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 2010 EAI

EAI에서 발행되는 전자출판물은
오로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또한 내용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온전한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어떠한 상업적 목적을 위한 복사와 출판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EAI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 본 출판물을 게시할 시에는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AI의 모든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서울 중구 을지로4가 310-68 삼풍빌딩 909호
Tel. 02 2277 1683
Fax 02 2277 1684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결정요인: '북한 핵실험과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 비교

한광희
서울대학교

1. 서론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한반도는 지정학적인 이유로 인하여 중국의 안보에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청나라는 일본에게 한반도에서의 우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전쟁을 치렀고, 1949년 수립된 신생 중화인민공화국의 마오쩌둥(毛澤東)은 중국 동북지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Lieberthal 2004, 89-90). 한국전쟁이 끝나고 분단된 한반도에서 중국은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 한반도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¹ 하지만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 초반에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해체되고 탈냉전기에 들어가게 됨에 따라 중국의 대한반도 인식이 변화가 발생하였다. 1990년대 초반 중국의 변화된 대한반도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1992년 8월 한중 국교 정상화이다. 탈냉전기의 변화된 국제정세에 대한 반영과 국내경제발전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은 북한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수교를 맺게 되었고 이후 중국은 한국과 북한사이에서 경제적으로는 한국과 관계를 확대하고, 정치적으로는 북한과 관계를 유지하는 이른바 “등거리 외교”를 구사하였다(김재철 2003).

(1) 문제제기

탈냉전기 이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핵심적인 기조로 이해되었던 “등거리 외교”는 2000년대 후반 한반도에서 발생한 북한의 도발 행위와 이에 대한 중국의 상이한 반응으로 인하여 과연 중국의 한반도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만들었다.



① 북한 핵실험과 중국의 대응

제2차 북핵문제가 발생하고 북한이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하자 중국은 자국의 대외원칙 기조인 내정불간섭의 원칙을 깨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2006년 10월 9일에 감행된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인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Resolution 1718)에 중국은 찬성표를 던졌고, 2009년 5월 25일에 감행된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조치인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Resolution 1874)에 대해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와 더불어 중국 외교부의 친강(秦剛) 대변인은 비난성명을 통해 북한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중국은 북핵 실험에 관한 안전보장 이사회의 적절하고 균형 잡힌 조치를 지지하며, 관련회의에 책임 있고 건설적인 태도로 참여할 것이다(중국외교부 홈페이지).”

② 천안함 사건과 중국의 대응

2010년 3월 26일 한국 해군 초계함 PCC-772 천안(이하 천안함)이 서해 백령도 앞바다에서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민군 합동조사단을 꾸려 천안함이 침몰하게 된 경위에 대해 조사를 하였고, 5월 20일 사건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 윤덕용 합동조사 단장은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수중폭발의 결과로 침몰했다”(〈조선일보〉, 2010/5/21, 1)는 결과를 발표하였다. 천안함 사건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5월 3일부터 5일간 중국을 방문하여 후진타오(胡錦濤) 국가 주석과 회담을 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와 관련한 비난 여론이 한국에서 일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한데, 반해 한국 내 중국 전문가들은 이를 계기로 북핵 실험 이후로 소원해졌던 중북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평가를 내렸다(〈한겨레〉, 2010/5/10, 3). 이와 더불어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후 북한에 대한 후속조치에 중국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천안함에 대한 공격을 규탄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이 북한을 공격주체로 명시하지 않은 채 통과 되었고,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친강 대변인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 하였다.

“관련 당사국들이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빨리 천안함 사건의 페이지를 넘기기를 희망한다(중국외교부 홈페이지).”

2000년대 중후반이라는 비슷한 시기에 북한에 의해서 감행된 북한 핵실험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중국의 상이한 대응방식은 중국이 대한반도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의문에서 비롯한 이번 연구의 핵심 질문은 ‘북한



핵실험 때와는 달리 천안함 사건 해결과정에서는 왜 중국은 대북 호의(benign)정책을 선택하였는가이다.

(2) 사례의 선정: 분석수준의 문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결정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왜 북한 핵실험과 천안함 사건이라는 사례를 택했는지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사례를 비교하기 위해 필요한 분석수준의 문제에 있어 북한 핵실험과 천안함 사건은 사건의 성격에 있어 북한 핵실험은 핵비확산이라는 국제레짐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이고, 천안함 사건은 한반도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문제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두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책적인 고려가 다를 수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두 사례를 선정한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북한 핵실험과 천안함 사건은 비슷한 시기에 북한이 일으킨 도발행위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사건을 사례로 선택함으로써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위협을 통제할 수 있다. 둘째 더욱 중요하게는 이 글의 목적과 관련하여 두 사건이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의 대 중국 인식과 관련하여서는 주목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표-1]은 천안함 사건이후 한국의 동북아 주변 5개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1]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2007	21.1	25.8	36	15.5	1.3
2008	16.2	34.1	33.6	15	1
2009	12.4	17.6	52.7	15.8	1.1
2010	8.2	10.3	55.5	24.5	1.2

출처: 이상신(2010).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2010, 91)에서 재인용.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3가지이다. 첫째 미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감소했다는 점이다. 이는 천안함 사건이 후 빠르게 강화되어가고 있는 한미동맹관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은 천안함 해결과정에서 협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대규모 한미합동훈련을 동해와 서해상에서 실행하였다. 둘째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에 있어 천안함 사건은 46명이라는 인명피해를 수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했던 2009년도와 비교하여 미미한 수준으로 위협인식이 증가했다는 점이다(이상신 2010, 91). 셋째 공격의 주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의 주체였던 북한보다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더 많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전 시기의 조사에서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이 15% 대로 거의 변화가 없었음을 감안할 때, 2010년도의 증가원인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중국의 태도 변수로 볼 수 있다(이상신 2010, 91).



결국 북한 핵실험과 천안함 사건은 사건이 가지는 수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사건 이후의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조선일보〉 2010/7/22, 5)²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논의될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서의 협력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하는 이 글의 사례로 북한 핵 실험과 천안함 사건의 비교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이어지는 절에서는 북한의 도발이라는 변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알아보기에 앞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결정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이번 절에서는 먼저 탈냉전기 이후 변화하는 중국의 대외전략 원칙들을 살펴 볼 것이다. 그 후에 안보이익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결정의 핵심적인 고려사항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탈냉전기 중국의 대외원칙

냉전기 중국의 대외정책의 기본 원칙은 1953년 중인회담에서 주언라이(周恩來) 총리가 제시한 평화공존 5원칙³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개혁기 지도자인 덩샤오핑(鄧小平)이 1980년대 후반 평화공존 5원칙은 새로운 국제 정치 질서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중국 대외정책의 핵심 원칙임을 재확인 하였다(Deng 1999, 52). 이와 더불어 덩샤오핑은 국가의 핵심적인 이익으로서 국가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국가의 주권과 국가 안보는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국가의 권리(國權)는 인권보다 더 중요하다. 전자를 손상시킨다면 후자는 의미가 없다(Deng 1999, 50).”

주언라이와 덩소핑이 내세운 전통적인 대외원칙들을 기반으로 하여 탈냉전기에 중국은 새로운 외교 원칙들⁴(김애경 2005, 220; 이동률 2009, 171; 이정남 2010, 50; Snyder 2009, 141)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원칙들은 나오게 된 배경과 내용에 있어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2) 중국의 안보이익과 한반도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 증가와 종합국력의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에게는 지속적인 경



제성장이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주변지역의 안정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동북 지역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한반도 지역의 안정은 중국이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안보이익이다. 이와 관련하여 글래저(Bonnie S. Glaser)는 중국이 한반도에서 가지는 이익의 우선순위를 그 중요도에 따라 평화유지, 한반도 안정 유지, 중국 동북 국경지역에 적대적인 외국세력의 등장 억제, 한반도 비핵화로 보고 있다(Glaser 2009, 5-6). 이와 유사하게 샴보(David Shambaugh)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적 계산의 첫째로 북한 정권의 유지를 들고 있으며 그 이유로 북한 정권 붕괴가 가져올 중국의 정치, 경제적 안보 위협을 꼽고 있다.(Shambaugh 2003, 45) 반면 지(You Ji)는 북한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외과 수술적 공격(surgical strike)이 감행될 경우, 중국이 의도치 않게 전쟁에 휘말리는 게 되는 것이 중국이 가장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한다(Ji 2001, 395).

이처럼 중국 전문가들에 의한 안보이익의 중요도 분석에 인식의 편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중국의 정책결정자들이 서로 다른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에 대한 인식의 차를 중심으로 분류해 보면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역(strategy buffer zone)으로 인식하면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전통주의자(traditional geopolitics school), 지역의 안정을 더욱 중시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 국가 대 국가(normal state-to-state)”로 전환하려고 하는 발전도상국가론자(developing country diplomacy school), 증강된 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신흥강대국론자(rising great power diplomacy school)로 나누어 볼 수 있다(Kim 2010, 59-63). 이들은 국익과 안보인식에 있어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한반도에 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먼저 전통주의자들은 북한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대북한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발전도상국가론자들은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의 핵심적인 안보이익을 손상시키고, 지역의 불안정을 초래했다고 판단하면서 다자적인 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Kim 2010, 61). 마지막으로 신흥강대국론자들은 발전도상국가론자들과 인식을 같이 하면서, 그 해법에 있어서는 발전도상국가론자들과는 달리 대북정책변화 등과 같은 더욱 강력하고 단호한 방법을 찾을 것이다(Kim 2010, 62). 반면 핵문제와 같이 세계적, 지역적 차원의 위협을 가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세 집단 모두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안정이 유지되는 것이 중국의 안보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다양한 전략적 사고와 해법들에 대한 논의들을 실제사례에 적용시켜 보고자 한다.

3. 북한의 도발 행위와 중국의 대응

(1) 북한 핵실험

북한은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2006년에 이루어진 1차 핵실험에



대해 중국은 “북한이 제멋대로(悍然) 핵실험”을 하였다고 강도 높게 비판을 하였다. 중국이 사용한 제멋대로라는 표현은 중국이 핵심적인 국가이익을 침해받았을 때 강력한 적대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북한에게는 처음으로 이 표현을 사용하였다(김홍규 2008, 237). 또한 북한에게 느낀 실망감과 적대감이 수사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듯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제3조의 원칙⁵을 깨고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에 찬성표를 던졌다.⁶ 이와 더불어 중국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의거하여 두 차례에 걸쳐 홍콩에서 북한 화물선을 억류하였다.⁷

이와 같이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중국의 강경한 모습은 2009년 2차 핵실험에서도 나타난다. 중국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결의안은 이전 결의안 보다 더욱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었다([표-2] 참조). 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후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이 지원 하던 대북사업의 대상 기업이 유엔 결의안 제재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는 이유로 사업을 취소시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조선일보〉, 2009/7/30, 1).

[표-2] 결의 1718호와 결의 1874호의 내용 비교

	결의 1718호 (2006.10.14)	결의 1874 (2009.6.12)
규탄수위	규탄한다	가장 강력하게 규탄한다
화물검색	금지물품(금수무기, WMD, 미사일) 적재한 화물검색	공해상 의심선박 검색 금지품목 발견시 압류·처분
수출통제	무기류, 미사일, WMD, 사치품 관련 기술훈련 및 서비스	모든 무기 관련물자
금융제재	WMD·미사일 관련 개인·단체의 자원 동결	WMD·미사일에 기여할 수 있는 자원 동결을 포함한 금융거래 금지 및 대북 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금지 무상원조, 금융지원, 양허성 차관의 계약 금지 및 기존 계약 감축

출처: 조민·김진하(2009, 81).

하지만 중국이 대북제재라는 방식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고자 했는가에 대해서는 엄밀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중국은 1차 핵실험이 감행되었던 2006년에 북한에 수출하던 주요 곡물의 양을 엄청나게 줄이는 조치를 취했다. 반면 중국의 수출량을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국가 경제에 필수적인 전략자원인 원유의 대북 수출량은 2000년대에 들어 거의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6년도에 급격하게 줄었던 주요곡물의 수출량도 2007년 이후에는 다시 2006년 이전의 수출량 이상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차 핵실험이 감행되었던 2009년의 데이터를 통해서도 2006년 때와 같은 의미 있는 변화를 발견해 낼 수 없다.

원유와 곡물과 같이 전략자원인 반면 국민 경제와 삶에 필수적인 자원을 제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경향신문〉 2009/10/8, 1)⁸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상관없이 북한의 정권 유지에 필수적인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3] 북한의 주요 물자 대 중국 수입량

		2004(a)	2005(a)	2006(b)	2007(b)	2008(c)	2009(c)
에너지 (단위:만톤)	원유	53.2	52.3	52.4	52.3	52.8	51.9
	작년대비 증감율(%)	-	-1.7	0.2	-0.2	1.0	-1.7
주요곡물 (단위:만톤)	보리	272	382	0	28	390	350
	작년대비 증감율(%)	-	40.4	-100	N/A	1292.9	-10.3
	옥수수	39,337	270,798	39,216	53,688	97,637	102,017
	작년대비 증감율(%)	-	588.4	-85.5	36.9	81.9	4.5
	쌀	37,484	47,613	38,479	80,741	20,078	79,368
	작년대비 증감율(%)	-	27.0	-19.2	109.8	-75.1	295.3
	수수	120	146	25	4	67	0
작년대비 증감율(%)	-	21.7	-82.9	-84	1575	-100	

출처: (a) 원유: KOTRA 해외무역관보고, 2006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p. 23에서 재인용.

(b) 주요곡물: World Trade Atlas, 2006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p. 35에서 재인용.

(c) World Trade Atlas, 2008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p. 28, p. 29에서 재인용.

(d) China Customs, 2009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p. 24, p. 25에서 재인용.

2000년대 들어 두 차례에 걸쳐 감행된 두 번의 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발전도상 국가론자와 신흥강대국론자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국은 북한과의 외교원칙을 깨고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유엔이라는 다자적인 틀을 통해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는 전통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중북관계의 특수성에도 어긋난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두 그룹이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책임지는 대국으로서의 모습에 더 부합하는 전략적 선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재라는 선택이 북한 정권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라는 전략과 병행되어 나타남에 따라 전통주의자들의 입장이 완전히 배제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다.⁹



(2) 천안함 사건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 주석은 상해 세계 엑스포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사건으로 죽은 장병들에 대한 애도를 표하면서 처음으로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공식발언을 하였다(Snyder and Byun 2010, 1). 이명박 대통령과의 공식적인 만남이 있는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한중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식적 채널을 통해서라도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드러내었다(Snyder and Byun 2010, 3). 한국과 북한의 정상을 비슷한 시기에 차례로 만난 중국은 천안함 사건의 해결과정에서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반도의 안정을 거듭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다.

[표-4] 천안함 사건에 대한 시기별 중국의 공식입장 추이

시기	중국정부의 입장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 이전	
4월 20일 중국 외교부 브리핑	한국정부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애도 표시 한국측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진행과 적절한 처리 당부
5월 6일 중국 외교부 브리핑	김정일 방중과 천안함 사건의 별개 사안 강조 김정일 방중에 대한 한국정부의 비판적 문제제기에 중국의 고유한 외교주권으로 대응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발표 이후	
5월 20일 중국 외교부 브리핑	각국의 냉정하고 자제하는 태도 당부 시비곡직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 대처
5월 27일 중국 외교부 브리핑	1차적 자료 미확보, 관련 정보 수집 중(객관적 자료 확보의 중요성 강조)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대국적 견지에서 냉정하고 적절한 문제 처리
유엔 안보리 회부 전후	
6월 10일 중국 외교부 브리핑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대국적 견지 강조 냉정하고 적절하게 유엔 안보리 개입문제 처리
6월 22일 중국 외교부 브리핑	냉정하고 자제하는 태도로 긴장고조 경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대국적 견지에서 문제 처리
6월 29일 중국 외교부 브리핑	단기적으로 각국의 대화협상을 통한 천안함 사건 처리 장기적으로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 추진

출처: 원동욱 · 김재관(2010).



위의 [표-4]는 천안함 사건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에서 중국이 외교부 브리핑을 통해 밝힌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분석해 보면 중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객관적인 사건 조사”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소행으로 조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는 “각국의 냉정하고 자제하는 태도”를 당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틀에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한 강조는 이후 천안함 사건이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중국 외교부의 브리핑에서 재차 확인된다. 하지만 이후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대상으로 서해와 동해 지역에서 미 항모 조지워싱턴호(USS George Washington, CVN 73)를 포함하는 대규모 해상훈련 계획이 언론에서 언급되자, 중국은 이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중앙일보〉 2010/7/8, 12).¹⁰

천안함 사건에 대해 중국은 사건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사건을 한반도 내의 문제로 규정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빠르게 해결되기를 원했다. 이러한 입장은 전통주의자, 발전도상국론자, 신흥강대국론자들 사이에서 모두 공유할 수 있는 전략이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안정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입장에서 천안함 사건은 한반도 내부 문제로 규정하는 것이 사건을 관리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한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3) 소결

중국의 전략적 사고의 틀에서 북한 핵실험과 천안함 사건을 이해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함의를 도출해 낼 수 있다. 먼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반응을 통해 중국이 가진 정책적 한계를 볼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안보이익 변화에 있어 북한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와 관련 되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에게 있어 북한은 그 존재 자체가 전략적 완충지역¹¹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외부적 충격 혹은 내부적 요인으로 인한 북한의 정권 붕괴는 중국 동북지역으로의 대량 난민 유입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켜 중국의 안보환경을 위협할 수 있다. 반면 반복되는 북한의 핵실험과 북핵 보유 선언 등과 같은 북한의 도발 행위는 중국을 포함한 역내 안보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핵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자국의 안보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은 북한정권을 유지시키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중국이 가지는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의 정책적 한계는 다음의 두 가지 상황과 만나게 된다. 첫째 북한이 핵을 대외정책 및 자위(自衛)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목적에 있어서는 이론(異論)이 존재¹²하고 있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수단이 바로 핵이라는 것이다. 결국 북한이 수단으로써의 핵을 상당기간 포기하지 않는다고 보았을 때 중국은 한반도에서 가지는 안보이익들 간의 충돌이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둘째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 중국은 선택 상의 제약을 받게 된다. 북핵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교체도 가능하다고 보는 미국과 한국은 한편으로 북한 정권을 유지해야 하는 입장을 가진



중국보다 북핵문제 해결 방식의 선택에 있어 그 폭이 넓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신흥강대국론자들의 입장에서는 다른 두 그룹보다 강력한 제재 수단을 행사할 유인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북한의 정권교체까지를 의미하는지는 불명확하다. 다시 말해 미국과 한국은 북핵 해결을 위해 북한 정권의 변화를 위한 강력한 경제제재의 사용이라는 유인을 가지지만 중국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중국은 북핵 실험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권이 유지될 수 있게 전략적인 물자를 제공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천안함 사건이 주는 함의와 관련된 것이다. 중국의 안보이익이라는 입장에서 천안함 사건은 평화유지와 관련된 사안이었다. 따라서 중국은 천안함 사건에서 기인하는 추가적인 분쟁의 소지를 억제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현상을 유지시키려는 노력을 하였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는 거듭된 북핵 실험과 천안함 사건에서 나타난 중국의 다른 모습의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중국은 자국의 안보환경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북핵 실험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동조하여 북한을 강하게 비판한 반면, 한반도 내부의 안정과 관련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위기가 더 큰 위기로 확대되지 않게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때 중국은 대한반도 정책결정에 있어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하였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의 해결과정에서 보여준 중국의 중립적 혹은 북한 호의적인 반응¹³은 한국으로 하여금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평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의 대중 인식이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중 간에 맺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戰略協作伙伴關係)'에 대해서도 재고(再考)해보게 되었다. 2009년 한국과 중국은 정식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맺음으로서 한중관계를 격상시켰다. 이는 중국의 신안보관에 바탕을 둔 것으로 관계를 맺은 국가와 "상호신뢰, 상호이익, 평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조영남 2009, 11-12). 하지만 중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맺은 국가인 한국이 위기에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구체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즉 천안함 사건에서 나타난 한중 간의 모습은 양국 간의 관계가 수사적으로는 격상되었지만, 실질적인 협력의 방향과 내용이 부재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4. 결론 : 한중 협력을 위한 제언

상대방이 존재하는 양자 혹은 다자 게임에서 일방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형태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가능할 수도 있지만 전쟁에 따르는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가진 이익의 손실을 일정부분 감내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 핵실험과 천안함 사건에서 나타난 중국의 행동을 통해 한 국가의 합리적인 정책결정이 다른 국가에게는 그 의도에 대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목격하였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결정은 자국의 다양한 전략적 고려에 기반한 합리적인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핵의 존재로 인해 그리고 남과 북이라는 두 개의 대상을



상대해야 함으로 인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번 절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앞선 절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한중 간의 협력에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들을 중심으로 살펴 볼 것이다.

(1) 안보이익에 대한 투명성 제고(提高)

한국과 중국은 북한 핵실험에 있어 넓게는 한반도 비핵화, 좁게는 북한 핵실험 반대라는 안보이익을 공유하고 있었다. 반면 천안함 사건 때에는 한국은 공격 주체인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안보이익이었던 것에 비해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안정유지가 자국의 안보이익이었다. 천안함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다른 안보이익을 가졌다는 사실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한중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국은 중국이 북한 핵실험 때와 같이 한국의 편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중국에게는 자국 나름의 전략적 판단과 이익이 존재하고 있었다. 결국 한중 사이에 서로가 가지는 다른 안보이익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보이익의 원칙과 기준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한중 양국이 각자의 모든 안보이익에 대해서 투명성을 제고 시킬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알려진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제시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Chung 2007, 120). 이를 통해 양국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희망에 “근거한 생각(wishful thinking)”의 한계를 인식하고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켜야 한다(김홍규 2010, 55). 천안함 사건 때에도 한국은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해 다른 해석을 하고 있었다.¹⁴ 특히 향후에 진행될 북핵문제 해결과 관련하여서는 중국이 상당기간 동안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현재 중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상황 속에서 북한 핵문제를 관리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는 한국의 비핵화 우선 원칙과 대치되는 것으로 양국 간의 불신과 갈등의 원인으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이러한 차이점을 활용하여 한중 사이에 이간계 전략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김홍규 2010, 55).”

(2) 이분법적 사고 탈피

천안함 사건의 해결과정에서 동북아 지역은 중국과 북한을 한편으로 하고, 한국과 미국을 다른 한편으로 급속히 관계가 냉각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해상훈련을 감행하였고, 중국은 서해 상에서 계획된 훈련에 대해 주권침해라는 명분을 들어 강하게 반발하였다. 한반도를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 간의 불필요한 긴장 조성은 지역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틀로 사용되고 있는 6자 회담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불필요한 긴장으로 인한 비핵화 프로세스의 지연은 북핵 상황을 더욱 악화시



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이해 당사자들은 안보이익의 투명성 제고를 바탕으로 하여 동지가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협력의 가능성을 높이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은 중국이 한반도에서 가지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한국은 중북 관계와 한중 관계를 경제 교류의 크기로 그 우위를 판단해서는 안 되며, 중북관계의 역사와 중국이 북한에게 가지는 안보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반면 중국은 북한의 도발행위로 인해 느낄 수 있는 한국의 안보위협과 이에 따르는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양국 간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군사·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의 폭과 깊이를 제고시켜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과정과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중 양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국가들은 서로가 가지는 안보이익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 차이와 다른 해법으로 인해 동북아 지역은 탈냉전기에 들어 유래 없는 갈등 양상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갈등을 넘어 다시 협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 예로써 동북아 역내 국가들은 신중한 태도로 6자회담 복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한겨레〉 2010/10/30, 1).¹⁵ 하지만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해상영토 분쟁을 겪고 있으며 미국은 이례적으로 삼국 간의 영토 분쟁에 개입하여 일본의 편을 들어 주었다(〈한겨레〉 2010/10/30, 4).¹⁶ 한국은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논쟁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으며,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적 노력은 이들 국가들이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남아있다. 그것은 바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안보이익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내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냉전적인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었을 때 한중 양국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이해 당사국들 간에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진정한 논의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주(註)

¹ 냉전시기 중국은 북한과 경제문화협력협정(1953년)과 조중우호협력지원조약(1961년)을 맺고 특수한 관계를 유지시켰다. 중북관계에 있어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갈등을 내재하고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김흥규, "중국의 북핵외교,"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윤영관·신성호편, (2008, 199-200). 하지만 중북관계의 특수성에 이론의 여지는 없다.



- ² 한국과 미국은 7월 21일 열린 한·미 2+2 회담에서 6자회담에 대한 선결조건으로 북한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하여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 미 국무장관은 “북한은 천안함 침몰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되돌릴 수 없는(irreversible)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주고, 또한 도발적이고 호전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³ 영토주권의 상호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 불간섭, 호혜평등, 평화공존.
- ⁴ 탈냉전 이후 중국이 만들어 온 새로운 대외원칙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중반 제기된 신안보관(新安保觀)이다. 신안보관은 평화공존 5원칙, 경제적 상호이익과 협력, 대화와 협력을 통한 다자안보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둘째 2003년 정비젠(鄭必堅)과 4세대 지도부들이 제기한 화평굴기(和平崛起)이다. 화평굴기는 중국은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평화롭게 부상하여 주변 국가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셋째 2005년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유엔연설에서 제시한 조화세계(和諧世界)이다. 조화세계는 세계가 차이를 인정하면서 다양함을 추구(和而不同)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책임지는 강대국(負責人的大國)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 ⁵ 제3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약 쌍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 ⁶ 조민·김진하(2009, 60). 이 결의안은 핵무기·미사일 관련 물자 제품 교역 금지, 북한 자산동결 및 금융 중단, 무기 제조 관련자 여행 금지, 북한 화물 검색 협력, 이행 조치 보고 등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⁷ 조민·김진하(2009, 62). 중국은 2006년 10월 22일 홍콩에서 북한 화물선 ‘강남 1호’를 억류하였고, 10월 26일 강남 5호를 억류하였다.
- ⁸ 한국정부는 2009년 말에 이루어진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북결과와 함께 “중국이 북한에 제공하기로 한 식량·에너지 무상원조와 대규모 경제협력약속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위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을 중국 측에게 요청했다.”
- ⁹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분석이 분파들 간의 힘의 절대적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실제로 중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외교정책결정과정은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바탕으로 한 초보적인 해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 ¹⁰ 중국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과,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사설을 통해 한미합동훈련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이례적으로 언론에 동중국해에서의 해상훈련을 언론에 공개하였다.
- ¹¹ 셴딩리(Shen Dingli)는 북한이 전략적 완충지역으로서 중국이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군사배치를 줄임으로써 대만의 독립문제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보고 있다. 또한 북한은 한국과 일본에 배치된 미군의 안보위협을 중국과 일정부분 공유한다. Shen Dingli(2006, 20).



- ¹² 이러한 이론은 크게 북한 핵보유의 “협상지렛대론(bargaining-chip assumption)”과 “자위론(Self-help assumption)”으로 나뉜다. 각 입장에 대한 설명과 한계는 최명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북·중 관계.” 최명해(2009, 119-124) 참조.
- ¹³ 천안함 사건의 주체를 북한으로 명시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중국의 태도를 북한에 호의적인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 ¹⁴ 한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의거해 중국이 분명한 행동을 취해주기를 원했지만, 통상적으로 중국에서 의미하는 전략적이라는 개념은 “양국 간 단기적인 현안을 넘어 중장기적인 문제를 다루고, 양자 간 현안뿐만 아니라 지역 및 세계적인 문제를 같이 논의 할 수 있는 관계를 의미”하여, 동반자관계란 “양국 간 근본적인 이해의 충돌이 없으며, 비영합적(Non zero-sum)인 국제관에 입각해 상호 소통을 통해 주요 현안을 협력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관계”를 의미한다. 김홍규 (2010, 52).
- ¹⁵ 한중일 정상은 정상회담을 통해 “(6자회담이)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과를 낼 수 있는 회담”을 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 ¹⁶ 미국은 중일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가 미일안보조약 적용 대상지역임을 재차 확인하였다.

참고문헌

- 김애경. 2005. “중국의 화평굴기론 연구: 논쟁과 함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45-4.
- 김재철. 2003. “중국의 등장, ‘균형정책’, 그리고 한반도.” <중소연구> 27-4.
- 김홍규. 2010. “천안함 사태 이후 대중국 외교 과제.” <외교> 제95호.
- _____. 2008. “중국의 북핵외교.”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윤영관·신성호 편. 198-248. 파주: 한울아카데미.
- 권태호·박민희. 2010. “‘아시아 잡아라’ 미-중 경쟁 가열.” <한겨레> 10월 30일: 4.
- 박종세·최유식. 2010. “천안함 공격규탄 안보리 의장 성명.” <조선일보> 7월 10일: 1.
- 유신모. 2009. “2000만달러 대북원조 등 원자바오 방북결과 정부, 중국에 설명 요청.” <경향신문> 2009년 10월 8일: 1.
- 이동률. 2004.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에 대한 실증연구.” 《중국의 대내외 정치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 서울: FKI China Forum.
- 이상신. 2010. “천안함과 대외인식.” 《2010 통일외교조사 발표: 통일외교·통일론·통일세》.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 이용수. 2010. “北 천안함 책임지는 조치 없어…6자회담 할 때 아니다.” <조선일보> 7월 22일: 5.
- 이정남. 2010. “조화세계론을 통해서 본 중국의 동아시아 질서구상: 중화질서와의 비교를



-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0-1.
- 이제훈 · 박민희. 2010. “중, 대북 동맹 완전 복원 - 동북아서 입김 더 세질 듯.” <한겨레> 5월 10일: 3.
- 이태환. 2009. “미국, 중국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세종정책연구> 5-1.
- 이향수 · 이하원. 2009. “中, 시진핑이 지원하던 對北사업 돌연 중단.” <조선일보> 7월 11일: 1.
- 원동욱 · 김재관. 2010. “중국의 대북정책과 동맹의 딜레마,” <현대중국연구> 12-1.
- 정용환. 2010. ““서해 미국 항모’에 예민한 중국 왜.” <중앙일보> 7월 8일: 12.
- 조민 · 김진하. 2009. 《북핵일지: 2009-1955》. 서울: 통일연구원.
- 조영남. 2009. “21세기 중국의 동맹정책: 변화와 지속.” <EAI 국가안보패널(NSP) 보고서> NO. 32.
- 중국외교부 홈페이지. 2009.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Qin Gang’s Statement on the Adop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74 on the DPRK Nuclear Test.” <http://www.fmprc.gov.cn/eng/xwfw/s2510/2535/t567565.htm>(검색일: 2010. 8. 29).
- 중국외교부 홈페이지. 2010.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Qin Gang’s Statement on UN Security Council’s Presidential Statement on the Cheonan Incident.” <http://www.fmprc.gov.cn/eng/xwfw/s2510/2535/t715389.htm>(검색일: 2010. 8. 29).
- 최명해. 2009. “북한의 2차 핵실험과 북·중 관계.” <국방정책연구> 25-3.
- 황준범. 2010. “6자, 회담을 위한 회담 안된다.” <한겨레> 10월 30일: 1.
- KOTRA. 2006. 2008. 2009.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 1961. 7월 11일.
- Chung, Jae ho. 2007. *Between Ally and Partner: Korea-China Relations and United Stat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Deng, Yong. 1999. “Conception of National Interests: Realpolitik, Liberal Dilemma, and the Possibility of Change.” In *In the Eyes of the Dragon: China Views the World*, ed. Yong Deng and Fei-Ling Wang.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 Glaser, Bonnie S. 2009. “China’s Policy in the Wake of the Second DPRK Nuclear Test.” *China Security* Vol.5, No.2
- Kim, Heungkyu. 2010. “From a buffer zone to a strategic burden: evolving Sino-North Korea relations during the Hu Jintao er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22, No.1(March).
- Lieberthal, Kenneth. 2004. *Governing China: From Revolution through Reform*. New York: W.W. Norton.
- Snyder, Scott. 2009. *China’s Rise and the Two Koreas: Politics, Economics, Security*. Boulder, Colorado: Lynne Rienner Publishers.



- Shambaugh, David. 2003.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Playing for the Long Term." *The Washington Quarterly* Vol.26, No.2(Spring).
- Shen, Dingli. 2006. "North Korea's Strategic Significance to China." *China Security* (Autumn).
- Snyder, Scott and See-won Byun. 2010. "China-Korea Relations: The Cheonan and China's 'Double Play'." *Comparative Connections* (July).
- Swaine, Michael D. 2009. "China's North Korea Dilemma." *China Leadership Monitor* No.30.
- Ji, You. 2001. "China and North Korea: a fragile relationship of strategic convenience."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10, No.28.

鄭繼永. 2009. "后朝核時代中國的朝鮮半島政策選擇." 〈韓國研究論叢〉12輯.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미국 맥아더재단(MacArthur Foundation)의 ‘아시아안보이니셔티브’(Asia Security Initiative) 프로그램 핵심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안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해 2009년1월 아시아안보연구원(소장: 전재성 서울대)를 설립하였습니다.

- 본 연구 보고서는 아시아안보센터의 연구 결과물로서 정책결정 및 학술연구, 각종 교육사업에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용할 시에는 출처와 저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 [EAI 출판]과 각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김하정 아시아안보센터 선임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7) hjkim@eai.or.kr
최은혜 아시아안보센터 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30) ehchoi@eai.or.kr

